

# '마약음료' 파문...우연히 먹게 됐다면?

### 마약 개인차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 특히 취약 "복용편 두근두근·발작...1시간내 위세척해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필로폰 성분이 든 '마약 음료수'를 일당에게 속아 마신 사건을 계기로 우연한 사고로 마약을 흡입 또는 복용했을 경우 응급 처치 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마약을 한 번 소량 복용한 경우 중독의 위험이 낮지만, 과량 복용할 경우 1시간 이내 위를 세척해 해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마약 성분은 우리 몸 속에 흡수돼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이 중 필로폰은 뇌 신경을 자극해 도파민(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키

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다. 과다 흡입하거나 복용했을 경우 마약 성분이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기 전 위장관에서 제거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줄여 중독 위험을 낮춰야 한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마약을 주사기로 투여하거나 먹는 것이 아닌, 필로폰을 탄 음료를 한 번 소량 먹는 정도로 중독되는 것은 아니어서 복용 후 특별한 증상이나 큰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회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량 복용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간질, 발작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 위

를 세척해 해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 마약 성분의 흡수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 중 하나가 위 안에 남아있는 독소(마약) 물질을 제거하는 위 세척이다. 입을 통해 위장으로 도관을 삽관한 후 위장에 물을 넣어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게 된다.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한다.

위 세척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하고 기도 확보도 필요하다. 조 원장은 "위 세척은 즉시 해야한다"면서 "몸에 흡수된 후 시행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내 시행한다"고 말했다.

같은 마약에 노출돼도 유독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마약 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오남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 재활센터장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듯, 마약도 쉽게 중독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서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뇌가 아직 자라고 있는 상태여서 치명적이고 한 번 중독되면 끊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청소년이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그 맛을 알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 일시적인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뇌의 보상회로가 망가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울증, 불안감 등이 느껴져 마약을 반복적으로 찾게 되고 결국 삶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 여수해경, '23년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개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국가 자격시험인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화순경찰, '자율방범대법'시행 눈앞 협력체제 구축

화순경찰서(서장 송기주)는 최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최창락 화순군방범연합회 연합회장 등 연합회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광양제철소-전남소방본부, 소방환경 합동 현장점검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전남소방본부와 함께 제철소 내 소방환경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광양제철소의 우수한 소방대응 역량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 협업 강화를 다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나주경찰, 나주 지역 축제 행사장 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7일 나주 배포 축제 행사장 내 불법촬영카메라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원)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 담양소방, 자율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 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달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450만명 몰렸는데 부상 1명...달라진 안전관리 비결은?

### 군항제에 대테러 장비...450만명 중 부상 1건 부상 불꽃쇼에 '키다리경찰관'과 '혼잡관리차' 대전시, 주최자 없는 축제 적용 안전관리 대책 이태원참사 원인 지목된 재난안전법 국회 계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이후 맞이한 봄철 축제에서 안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관리에 나서는가 하면 진해군항제에는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되는 등 지역 축제들이 '안전' 의식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10일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들은 인파 밀집 상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관리하는 등 관객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인파가 밀집하는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져 지자체 관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61회 진해군항제에는 총 450만명이 방문했는데, 부상자는 경계선에 발목을 접질린 60대 여성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에서는 대테러 경비용으로 쓰이는 '이동식 대중경보시스템' 도입이 그 비결로 꼽힌다.

80dB 이상 소리를 주변 1km까지 전달하는 이 장치는 관광객이 밀집할 때마다 "앞사람과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여 서로의 안전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경고 방송을 해인과 밀집을 막았다고 한다. 80dB은 지하철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창원시는 인파 밀집과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빗장 명소별로 행사를 분산 개최하고 안전 관리 요원 6000여명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했다고 한다.

지난 6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에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책이 곳곳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행사 당일 역대 최대인 안전요원 6100여 명을 투입했다. 행사 기획 단계에는 지역 재난전문가 30여 명을 참여시켜 불꽃축제 행사 안전 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혼잡관리차'를 배치해 인파를 분산시켰다. 혼잡관리차는 LED 조명과 방송시설을 설치해 차량 위에 경찰이 올라가 방송할 수 있도록 제작한 차량이다.

병목 구간인 광장 인근 교차로에



는 70cm 사다리 위에 올라간 '키다리 경찰관'이 배치되어 "일정 신호에 맞춰 전전히 이동하세요"라며 인파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광안리 해수욕장에 몰린 약 75만명 중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마친 지자체도 다수다.

대전시는 시나 자치구 주최 행사 외에 민간 주도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도 적용되는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5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를 열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축제 개최 전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과 안전 관리비 반영,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골라야 하는 '재난안전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당국의 일괄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태원 참사 직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주최자 없는 축제'에 적용할 안전 매뉴얼의 부재가 지목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이날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 국가안전의 날 앞두고 열린 재난 대응 훈련

1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국가안전의 날 기념' 재난 비상 훈련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화재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

### 수입고기, 국내산으로 사기 업자 불구속 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농관원충북지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육판매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지원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한 정육점에서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살(12t), 호주산 살치살(300kg) 2억8000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명,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뉴스